



## 미국 : 아마존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 투표 실패, 노조 연방노사관계위원회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2021년 4월 9일, 아마존 앨라배마주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5,8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도매·백화점 노동조합(RWDSU)에 대한 배타적 대표권 승인 투표에 3,215명이 참여한 결과 1,798명이 반대, 738명이 찬성하여<sup>1)</sup> 아마존에 배타적 대표권을 가진 노조 조직이 무산되었다. 투표 결과는 최종적으로 연방 노사관계위원회(NLR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소매·도매·백화점 노동조합(RWDSU)은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내용은 사측이 선거 캠페인 동안 노조 탄압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정한 선거 절차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측에서 제출한 이의제기는 총 23건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아마존은 노동자들을 강제 회의로 참석시킨 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사와 개별 교섭할 수 있다(do it without dues)”라고 선전하고 “반대표를 던져라(Vote No)”라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조 방해 공작을 펼쳤다. 또한 노조가 조직되면 이에 따라 임금 및

각종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량 해고 및 시설 폐쇄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sup>2)</sup>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투표함에 관한 문제 제기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투표함은 앨라배마주 베서머(Bessemer) 물류창고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사측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은 아마존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마존 측은 다만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결정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투표함에는 오직 미국 연방우체국(USPS)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주 내로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의 지역 감독관이 이의제기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감독관은 새로운 선거를 명령하거나 혹은 아마존의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노조와 교섭하도록 명할 수 있다.<sup>3)</sup>

- 1) 그 외에 대략 500표는 투표자의 자격 여부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되었으나(challenged ballot), 이를 감안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어 결과에는 집계되지 않았다.
- 2) CNBC(2021.4.9), “Amazon Wins Enough Votes to beat Union Effort in Alabama”, Retrieved on Apr.20.2021, <https://www.cnbc.com/2021/04/19/amazon-prevented-free-and-fair-election-in-alabama-union-alleges.html>
- 3) CNBC(2021.4.19), “Amazon Illegally Interfered in Alabama Warehouse Election, Union Alleges in Complaint to Federal Officials”, Retrieved on Apr.20.2021, <https://www.cnbc.com/2021/04/09/amazon-union-vote-live-updates-as-counting-resumes-in-alabama.html>



## 미국 : 돌봄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계획

가정돌봄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계획에서 핵심을 차지한다.<sup>1)</sup> 이 계획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8년간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돌봄 투자를 포함해 인프라 재건 계획에 책정한 예산은 총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막대한 예산과 그에 따른 세금 인상 압박으로 인해 야당인 공화당과 기업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돌봄 확장 배경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서비스노조(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 SEIU)의 로비가 있었다.

한편으로 돌봄 확대 계획은 고령인구 증가를 감당할 국가의 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낸다. 2018년에 미국은 이미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장기 돌봄에 1,300억 달러를 지출했고, 그중 710억 달러가 가정돌봄에 쓰인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매년 500억 달러를 가정돌봄에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 액수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지

출 규모로는 향후 고령화 사회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2~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인구의 규모도 문제지만, 현재 미국이 모든 노인에게 공공 장기 돌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여성 및 유색인종 위주로 구성된 가정돌봄 노동자의 중위소득은 연 1만 7,200달러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푸드스탬프 등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에 필수노동자로서 일선에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저임금을 받는 데다 병가도 없고 보호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보수가 좋은 돌봄 일자리를 지원하여 가정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급이 늘어나고 전체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1) The Washington Post(2021.4.2), "Biden Jobs Plan Seeks \$400 Billion to Expand Caretaking Services as U.S. Faces Surge in Aging Population",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1/04/02/caregiving-elderly-white-house-infrastructure/>(검색일 : 2021.4.25)

## 미국 : 바이든 정부,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에서 유급노동 폐지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유급노동과 복지 간의 연계를 점차 약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비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 조건의 변화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되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메디케이드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급노동(단,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록도 인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신설하여 유급노동과 복지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2월부터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은 미국의 65세 미만 저소득층이고,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등록 외국인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유급노동 조건

없이 메디케이드를 수급할 수 있도록 다시금 수급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급에 유급노동 조건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연방정부의 관련 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 3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3월 17일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아칸소주와 뉴햄프셔주에 서한을 보내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에서 유급노동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 바 있으며, 해당 주들은 이에 따라 주별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유급노동 조건을 삭제하였다.<sup>1)</sup> 위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 Politico(2021.3.17), "Biden Administration Begins Throwing out Medicaid Work Rules", Retrieved on Apr 20th, 202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3/17/biden-administration-medicaid-work-rules-476856>

## 미국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활동 지속해야

최근 미국의 경제 및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네바다주, 아이다호주를 비롯한 많은 주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구직활동을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제외

한 다른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 결정을 두고 아직 남아 있는 수많은 구직자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협에 노출시켜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



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91만 6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6%로 하락했다. 특히 음식점, 술집과 같은 곳에서 그 추세가 두드러졌다. 주정부는 현 구직환경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던 시점과는 달라졌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현재 주정부 포털에서 소개하는 일자리들은 실제 구직자들의 거주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일자리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이 팬데믹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낮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강화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이들은 설령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단기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작 해당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구직자는 결국 고용주에게도 시간 낭비라고 덧붙였다.<sup>1)</sup>

1) CNN(2021.4.7), “Want to Keep Unemployment Benefits? Many States are Again Requiring a Job Search”, Retrieved on Apr.7.2021, <https://www.cnn.com/2021/04/07/politics/unemployment-job-search-requirement/index.html>”

### 미국 : 실업급여 대혼란 그 후 1년, 재청구에 따른 2차 혼란 가능성 제기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3월 이래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지도 1년이 지났다. CNBC 기사에 따르면,<sup>1)</sup> 2020년 4월에만 2,400만 명이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몇 주 동안에만 수백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초기에 신청했던 이들의 급여 수급 연한이 현재 1년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연한이 만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 여부는 주 노동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데, 각 주정부는 노동자의 최근 소득 이력을 통해 수급자격이 여전히 유효한지 심사한다. 통상적으로 이 기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추

가 원조 자격을 상실하는데,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실직자의 1/4이 1년간 실직상태였다고 한다. 직장을 새로 구했다고 해도 노동시간이나 급여가 충분치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도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노동절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는데, 이에 따라 주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한 만료 후 실업급여를 재신청해야 하는데 심사에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자가 수주간 수입 없이 지낼 가

능성이 있고, 조지아주 역시 새로운 실업급여 청구 시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연한 만료를 전후해 기술적인 문제를 겪은 바 있으며, 유일하게 뉴저지주가 재청구 및 검토 과정을 자동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이맘때 단기간에 대규모 노동인력이 실업급여

를 신청했던 만큼, 1년 연한이 만료된 현재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행 방식이 더디거나 부정확할 우려가 제기되는데, 사전에 실업급여 연한 종료 이후의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1) CNBC(2021.4.18), "Workers are a Year Into Collecting Unemployment Benefits. It's Causing Problems", <https://www.cnbc.com/2021/04/18/the-problems-workers-have-after-collecting-unemployment-benefits-for-a-year.html>(검색일: 2021.4.26)

## 미국: 바이든 정부, 취업비자 발급 재개 및 발급 수 확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의 장기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 경제난 및 고 실업률을 이유로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취업비자 발급을 재개하였다. 특히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인력의 취업비자인 H-1B 비자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직종으로 이민자를 다수 고용하였던 미국 기술산업 기업의 구인난에 숨통이 트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up>1)</sup>

또한 4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기존에 연간 6만 6천 명 규모로 지급하던 H2-B 비자를 8만 8천 명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불어 미국 국토안보부는 추가 비자 발

급분 중 6천 명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국적의 외국인에게 따로 배정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비자는 비농업 임시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업비자로(1년마다 연장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관광 및 요식업, 건설업, 조경산업 등의 업종에 주로 발급이 허가되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3만 5천 개의 비자를 추가로 발급하려고 했던 2020년 당시의 계획보다 약간 축소 및 지연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취업비자 발급이 재개되고 발급 수가 늘어나 외국인 취업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The Seattle Times(2021.3.30), "Biden to Let Trump's H1-B Visa Ban Expire in Win for Tech



Companies”, Retrieved on Apr 20th, 2021, <https://www.seattletimes.com/business/biden-to-let-trumps-h1-b-visa-ban-expire-in-win-for-tech-firms/>

2) The National Law Review(2021.4.22), “More H-2B Visas to be Released, DHS Announces”, Retrieved on Apr 25th, 2021,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more-h-2b-visas-to-be-released-dhs-announces>

### 독일 : 봉쇄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사업장 감소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독일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하여 영업(운영)을 전면 중단하거나 일부 단축한 사업장은 지난 1월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sup> IAB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3월 22일~4월 8일) 동안 영업 또는 운영에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조사대상 사업장 중 23%였다. 그중 영업(운영)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설문대상 기업의 약 6% 수준이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영업(운영)에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28%였는데, 그에 비해 약 5% 정도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한 영향은 각 산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도매 및 소매업 분야는 약 27%가 영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3%의 사업장이 영업(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 및 오락(여가) 산업과 같은 기타 서비스 업종의 경우 20%가 영업(운영)에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중 8%의 사업장이 영업(운영)을 전면 중

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는 요식 및 숙박업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87%가 영업(운영)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업(운영)이 전면 중단된 사업장도 약 1/3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장 중 약 12%가 영업(운영)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종업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약 9%의 응답자가 영업(운영)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약 13% 수준으로 증가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약 13%가 사업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업체 유지를 포기해야 할 위험 상황에 가장 많이 처해 있는 산업 분야는 요식 및 숙박업이었다. 이들 산업 분야에 속한 응답자의 41%가 사업장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고려하면 올해 파산에 이르게 될 사업장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베른트 피첸베르거(Bernd Fitzenberger) IAB 소장은 “연쇄적인 파산이나 부도를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현재의 설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봉쇄조치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이미 1차 봉쇄조치 경과 후 경제적으로 신속한 반등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즉, 봉쇄조치 해제 후 신속한 경제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 분야별로 무너진 시장이나 경제구조가 회복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울리히 발벨(Ulrich Walwel) IAB의 부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IAB 언론보도용 자료(2021), “Die Zahl der Betriebe, die vom Lockdown betroffen sind, geht leicht zurück”, 2021년 4월 19일자, <https://www.iab.de/de/informationsservice/presse/presseinformationen/becovidwelle11.aspx>

## 독일 : 사업장의 자율적 코로나19 테스트 시행 실태조사

2021년 3월 22일에 개최된 독일 연방정부의 각 부처 장관회의에서는 각 기업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겠다고 합의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되었다.<sup>1)</sup>

독일 정부는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무작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이행 실태를 파악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약 2,500명의 노동자와 1천 개의 기업(사용자)을 대상으로 연방노동사회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지난 3월 중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양측의 설문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사용자 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재 자신의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중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반수의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약 4월 중순까지 주 1회 이상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기업도 약 20%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약 69% 정도가 해당 사업장의 현장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노동자 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약 61%



의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아직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나머지 40% 노동자 중 약 30%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정기적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역시 결과적으로 약 70% 이상의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받았거나 받을 예정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에 발표된 동일한 내용의 설문에 따르면, 이 비율은 약 35%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만 회사 규모별로는 그 이행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약 64%인 것에 비하여,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행 수준은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제공을 원하는 노동자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동자의 약 84%가 사용자로부터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제공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스트 키트를 제공받은 노동자의 약 46%가 테스트를 한 바 있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약 57%가 테스트를 시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 키트의 제공과 관련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임한 사용자 중 약 43%가 비용적인 이유에서 아직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테스트의 경우 단지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는 것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이 노동자 개인의 건강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독일의 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1) 연방노동사회부(BMAS) 언론보도용 자료(2021), “Corona-Tests in der Wirtschaft: Ergebnisse der Umfragen bei Beschäftigten und Unternehmen”, 2021년 4월 8일자,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1/corona-test-umfrage-unternehmen.html>

### 영국 :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직원 수백 명이 해고 후 재고용 노동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실직

2021년 4월 1일 영국 최대 전력회사인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는 1천여 명에 달하는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해고 통지와 함께 새로운 노동계약

을 제시하는 ‘해고 후 재고용(fire and rehire)’을 시행하고 2주 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노동조건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주당 노동시간



은 40시간으로 기존보다 3시간 늘어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300~400명의 엔지니어가 마감시한(4월 14일)까지 불리한 노동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sup>1)</sup>

지난 5년간 시장가치가 4분의 1 이하로 하락하고 2019년 시행된 전기요금 상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브리티시 가스는 2020년 6월 인력 삭감과 더불어 기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브리티시 가스는 이와 관련해서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협의를 9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sup>2)3)</sup> 영국에서 ‘해고 후 재고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상당수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영국 일반노동조합(GMB)은 회사가 노동자라는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근 40일 이상의 파업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앤디 프랜더개스트(Andy Prendergast) GMB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록 상당수의 엔지니어가 회사의 협박으로 새로운 계약에 동의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비판했다.

- 1) The Guardian(2021.4.14), “Hundreds of British Gas Engineers to Lose Jobs in ‘Fire and Rehire’ Scheme”,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apr/14/hundreds-british-gas-engineers-lose-jobs-fire-and-rehire-scheme-tougher-employment-terms>
- 2) BBC(2020.6.11), “British Gas Owner Centrica to Cut 5,000 jobs”, <https://www.bbc.com/news/business-53006073>
- 3) The Guardian(2021.3.28), “‘A kick in the teeth’: British Gas Engineers Face Losing Their Jobs or Longer Working Hour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mar/28/a-kick-in-the-teeth-british-gas-engineers-face-losing-their-jobs-or-longer-working-hours>

## 영국 : 음식 배달앱 저스트 잇(Just Eat), 리버풀에서 1,500명의 배달원 직접 고용 예정

앱을 통해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스트 잇(Just Eat)이 2021년 말까지 리버풀에서 1,500명의 배달원을 노동자(worker)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sup>1)</sup> 딜리버루(Deliveroo) 등 여타 음식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저스트 잇도 자영업자 신분의 배달원을 통해 대부분

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스트 잇은 런던과 버밍엄에서 2천여 명의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자체적인 배달원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리버풀에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배달원과 달리 노동자 신분으로 직접 고용된 배달원은 최저임금, 병가 급여 및 휴일수당 등



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들은 정해진 노동시간 동안 일하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 자전거를 지급받는다. 다만 저스트 잇의 배달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배달업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저스트 잇 영국 대표이사 앤드류 케니(Andrew Kenny)는 직접 고용을 통해 배달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를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경제 노동자 노조인 ‘영국독립노동자연합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은 이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의 배달원이 우선적으로 직접 고용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홍보용 선전보다는 배달원과 대화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저스트 잇은 이번 고용 기회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배달원의 지원도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1) The Guardian(2021.4.21), “Just Eat to Offer 1,500 Liverpool Couriers Minimum Hourly Rate and Sick Pay”,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apr/21/just-eat-to-offer-1500-liverpool-couriers-minimum-hourly-rate-and-sick-pay>

### 프랑스 :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부분실업제도 특별 지원기간 만료 후의 대책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21년 4월 19일 엘리자베스 본(Elisabeth Borne) 노동부 장관은 5월 중순 카페나 레스토랑의 영업이 테라스에 한하여 재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방역 제한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 발표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영업장과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자유로운 근무여건을 되찾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sup>1)</sup>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기에 현재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실업 지원금(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을 정부와 고용주가 나누어 부담(정부 60%, 고용주

40%)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전환될 시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충격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방안 또한 논의되었다.<sup>2)</sup>

완전한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업<sup>3)</sup>의 경우 장기적으로 부분실업 특별 지원을 제공하면서 일반제도로의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 또한 논의되었다. 현재 교사와 경찰 인력을 비롯해 환경미화원, 버스 운전사 등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직군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4월 24일부터 2주간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졌지만 이에 대해 경제인 연합(Medef)과 중소기업협회(CPME) 등은 백신 수급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 1) 부분실업을 신청한 직원의 월급여 70%를 정부가 전면 보조(자세한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2722465](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272246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2739121](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2739121) 참조).
- 2) Les Echos(2021.4.19), “Emploi, vaccins, aides : le gouvernement concerte tous azimuts pour préparer la sortie de cris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emploi-vaccins-le-gouvernement-concerte-tous-azimuts-pour-preparer-la-sortie-de-crise-1307987>
- 3)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60% 이상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방역 관련 제한조치 대상 기업, 50% 이상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스키 리조트에 위치한 기업, 80% 이상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보호 부문의 기업(보호 부문에 대해서는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059816> 참조).

## 프랑스 : 코로나19 사망자 중 이민자 비중이 높아

2021년 4월 셋째 주, 프랑스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본 연구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4월 16일 발표한 연구<sup>1)</sup>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남성, 파리와 수도권 지역 거주자, 7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프랑스의 2020년 사망자 수는 총 6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9%), 증가치는 내국인 집단(+8%)보다 외국인 집단(+17%)에서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들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초과사망률<sup>3)</sup>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마그레브 지역 제외)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 출신의 경우 29%, 마그레브 출신의 경우 21%).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사망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에 프랑스 통계청에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지리적 요인을 비롯한 몇 가지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지역과 함께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수도권 지역에 이민자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높은 사망률은 이러한 지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민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와의 연관성 또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민자가 배달원, 지하철 또는 버스기사 등으로 일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더욱 쉽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과 관련된 다른 위험 요소 또한 강조되었다.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더욱 빈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다.



- 1) Papon and Robert-Bobée(2021), “Décès en 2020 : hausse plus forte pour les personnes nées à l'étranger que pour celles nées en France, surtout en mars-avril”,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353976>.
- 2) Les Echos(2021.4.16), “Covid : les immigrés frappés de plein fouet par la hausse des décès en Franc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covid-les-immigres-frappes-de-plein-fouet-par-la-hausse-des-deces-en-france-en-2020-1307659>
- 3)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공해사건 등과 같이, 특이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통상 일어난다고 기대되는 사망을 훨씬 넘어서 사망이 일어난 경우의 사망률을 말함.

## 일본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증가

후생노동성은 2월 12일 「2019년 취업 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sup>1)</sup> 이 조사는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것으로, 상용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한 1만 7,278개 사업장과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3만 6,52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94.5%였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84.1%였는데, 이는 전회 조사 대비 4.0%p 증가한 수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은 결과, '정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38.1%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일이 바쁠 때 대응하기 위해'가 31.7%,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가 31.1%였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재의 취업 형태를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를 묻은 결과는 '자신의 사정에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가 36.1%,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서'가 29.2%, '가계 보조를 위해, 또는 학비를 벌기 위해'가 27.5%로 나타났다.

직장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정규직 61.4%, 비정규직 33.1%), '복리후생'(정규직 37.9%, 비정규직 12.5%), '임금'(정규직 21.7%, 비정규직 6.7%)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노동시간, 휴일 등의 노동조건'(정규직 37%, 비정규직 42.8%)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1) ビジネスレパートレンド(2021.4), 「正社員以外の労働者のいる事業所が増加 - 厚労省調査」, <https://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1/04/036.pdf>

## 일본 : 일본 정부, 선택적 주 3일 휴가제 시행 검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선택적 주 3일 휴일제'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sup>1)</sup> 이 제도는 오는 6월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4월 5일 기자회견에서 “육아, 간호, 투병 등 생활과 일의 양립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도 다양한 근무형태의 추진은 중요하다.”라며 주 3일 휴일제를 도

입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주 3일 휴일제로 급여가 10~20% 삭감될 수 있다는 점, 일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민당에서는 주 3일 휴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 朝日新聞(2021.4.6), 「選択的週休3日制、政府と自民が検討 給与減る?課題も」,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P455WVKP45UTFK00K.html?iref=pc\\_ss\\_date\\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P455WVKP45UTFK00K.html?iref=pc_ss_date_article)

## 중국 :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 기간의 고용 상황 특징

중국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고용 상황을 종합해보면, 민간경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고용인구도 크게 증가해 본격적인 민간경제 시대에 진입했고, 2차 산업 종사자는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제조업 고용인구가 점점 중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현상도 보였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에서는 도시지역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도시에서 새롭게 증가한 일자리는 모두 6,5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2020년에도 1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민간경제의 고용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2015년 민영기업

과 자영업 고용인구는 2억 8,077만 1천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44.3% 증가한 4억 524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민간경제에 고용된 인구가 총고용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민간경제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8개 성(省)급 지역의 민영기업 및 자영업 종사자 수가 70% 이상 증가했는데, 그중 산시성(陝西省)의 증가 폭이 가장 큰 100%를 기록했다. 그리고 허난성(河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허베이성(河北省)이 뒤를 이어 7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이전에는 민간경제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시장 주체의 역할을 점



차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 종사자는 늘어나는 것도 이 기간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2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3차 산업 종사자는 3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민간경제의 고용 규모를 보면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가장 큰데, 지난 5년 동안 도소매업의 민영기업 및 자영업 고용자 수는 36.47%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12.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시지역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도시지역 제조업 고용인구는 2015년 7,839만 명에서 2019년에는 15.8% 감소한 6,602만 3천 명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비민영기업 제조업의 고용인구가 2015년 5,068만 7천 명에서 2019년 3,832만 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고용인구는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

후된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부 지역인 쓰촨성(四川省)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2015년 591만 2,300명에서 2019년에는 600만 6,200명으로 늘어났고, 구이저우성(贵州省)의 경우는 2015년 85만 526명에서 2019년 93만 7,205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베이징(北京)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2015년 119만 명에서 2019년 86만 9천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중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 노동력, 토지, 전력 면에서 상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제조업 고용 인구 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노동시장에서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중국의 6세 이상 인구 중 대졸 학력 인구 비중이 7% 정도까지 상승했고, 그중 부유한 지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고학력이 요구되는 ‘학력 압박’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베이징 지역의 6세 이상 인구 중 대졸 학력 인구 비중은 35%를 넘어섰다.

-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1.4.21),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围绕更大激发市场主体活力增强发展后劲 推出深化“放管服”改革新举措 部署推进减税降费落实和优化对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等的减税政策」, [https://www.ndrc.gov.cn/fggz/jyysr/jysrsbxf/202104/t20210421\\_1276936.html](https://www.ndrc.gov.cn/fggz/jyysr/jysrsbxf/202104/t20210421_1276936.html)
- 2) 21经济网(2021.4.10), 「中国“十三五”就业图谱: 私营个体就业占比过半, 制造业从业者“西迁”」, <http://www.21jingji.com/2021/4-10/00MDEzNzlfMTYyNDA0OQ.html>

### 중국 :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강력한 반(反)독점 관리·감독 시대 열어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2월 7일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이하 ‘반독점 지침’)'을 발표했다.<sup>1)</sup> 이 지침

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독점 행위 역시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이므로 인터넷 플랫폼도 반독점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다.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왔다. 2020년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4,289억 위안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부정적 현상도 드러났는데, 위조제품의 온라인 유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 개인정보의 유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별 가격 조작 등 여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었다.<sup>2)</sup> 최근에는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업체의 상품을 다른 쇼핑몰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본이 무질서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sup>3)</sup>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반독점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 지침은 △총칙 △독점 혐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국가 행정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을 통한 경쟁 제거 및 제한 △부칙 등 총 6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분석한 후, 개별적인 사안에서 지위 남용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반독점 지침은 △기업의 시장점유율 △관련 시장의 경

쟁 상황 △기업의 시장 통제 능력 △기업의 재정 및 기술 수준 △시장 진입의 난이도 등,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자세히 열거했다. 그리고 △불공정 가격 정책 △원가 이하 판매 △거래 거부 △거래 제한 △끼워팔기 △불합리한 거래 조건 추가를 통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은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합법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반독점 지침은 단순 협의처럼 보이는 경영 구조를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점적 기업결합 역시 반독점 심사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업결합이 신고 기준에는 미달하나 경쟁 기업을 제거 또는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국무원의 반독점 집행기관이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반독점 지침은 명시했다. 또한 반독점 지침은 행정권력 남용을 통한 경쟁의 제거 및 제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해 플랫폼 경제에서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 편에 서서 권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거 혹은 제한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에서 시장 주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공정 경쟁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sup>4)</sup>

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1.2.7),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

2) 澎湃(2021.3.16), 「[社论] 平台经济迎来强监管时代」,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https://www.thepaper.cn/newsDetail_)



forward\_11731049

- 3)央视网(2021.3.16), 「[央视快评] 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 <https://news.cctv.com/2021/03/16/ART1h33FXjoQuxvPU3uty8Yt210316.shtml>
- 4)新华网(2021.2.8), 「平台经济领域反垄断指南出炉」, [http://www.xinhuanet.com/2021-02/08/c\\_1127077957.htm](http://www.xinhuanet.com/2021-02/08/c_1127077957.htm)

### 브라질 : 성별 임금 차별 기업에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

브라질은 2021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가 있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 한도 내에 그간 차등 지급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PLC 130/2011)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원은 3월 30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한 통합노동법(CLT) 제401조에 벌금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성과 동일 업무(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여성이 기업을 상대로 임금 차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기업은 해당 여성의 고용계약 기간을 반영하여(최대 5년 한도) 차등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sup>1)</sup> 상원의 이러한 조치는 확대되는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PLC 법률은 2011년 마르카 필유(Marçal Filho) 전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노동당(PT) 소

속 파울로 파임(Paulo Paim) 의원이 다시 추진하면서 10년 만인 올해에 결실을 봤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이번 법안의 통가를 반기면서도 아직 촉매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상원을 통과한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승인과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가 필요한데,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1943년 통합노동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1950년대에 ILO 협약 제100호를 비준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약 25%로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글로벌 양성평등 순위에서 브라질은 2006년에 67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93위까지 떨어지는 등 성평등 지수가 더욱 하락하고 있다.<sup>2)</sup>

- 1) CUT(2021.4.1), “Senado aprova projeto que pune empresa por desigualdade salarial entre gêneros”, <https://www.cut.org.br/noticias/senado-aprova-projeto-que-pune-empresa-por-desigualdade-salarial-entre-generos-81d7>
- 2) CUT(2021.4.6), “Brasil cai no ranking global de igualdade de gênero”, <https://www.cut.org.br/noticias/brasil-cai-26-posicoes-em-ranking-global-de-igualdade-de-genero-604d>



## 브라질 : 358년 역사의 브라질 국영 우체국, 민영화되나?

브라질 정부의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통신 및 우편 업무를 수행하는 국영 우체국(A Empresa Brasileira de Correios e Telégrafos: ECT)의 민영화가 공식화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1년 4월 13일 우체국을 국가 민영화 계획(Programa Nacional de Desestatização: PND)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2021년 8월까지 민간 또는 국영 혼합 자본회사<sup>1)</sup> 설립 등 민영화 모델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상·하원의 지지를 확보해 적어도 2022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우체국 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침체에 빠진 브라질 경제의 회복을 기대한다.<sup>2)</sup> 하원도 이에 발맞춰 우체국이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던 우편서비스를 민간에 허용하는 정부 법안(PL 591/2021)을 4월 20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했다. 하원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280명이 정부 법안을 지지하는 찬성표를 던졌고 165명은 반대했다. 그러나 아직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 있고, 민영화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의회 내 찬반 입장도 팽팽하게 갈릴 전망이다. 일부 의원의 경우 우체국 민영화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브라질 국영 우체국은 1663년에 설립되어 1969년 통신부 소속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브라질 헌법은 편지, 엽서, 전보 등에 대한 업무 독점권을 국영 우체국에 부여하고 있다.

- 1) 예를 들어 우체국 업무 중 우편은 그대로 국영을 유지하고, 전신은 민영화하는 등 기존의 국영회사를 민간 회사 또는 국영과 민간이 혼합된 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 2) RedeBrasilAtual(2021.4.14), "Bolsonaro confirma quebra de promessa de campanha e oficializa intenção de privatizar os Correios", <https://www.redebrasilatual.com.br/economia/2021/04/privatizacao-correios-decreto/>
- 3) G1(2021.4.20), "Câmara aprova urgência de projeto que abre caminho para privatizar os Correios", <https://g1.globo.com/politica/noticia/2021/04/20/camara-aprova-urgencia-de-projeto-do-governo-que-abre-caminho-para-privatizar-os-correios.ghtml>